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본 ‘환경정의’ 연구 지형

—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중심으로*

배혜정**

| 목차 |

- | | |
|-----------------------------|------------------------------------|
| 1. 머리말 | 4. 인정 정의 연구: 비가시적 폭력과 낙인, 타자화 |
| 2. 분배 정의 연구: 위험의 불평등 | 5. 에코페미니즘적 성찰: 교차성·다중 정의·상호 돌봄의 접속 |
| 3. 절차적 정의 연구: 정보독점과 기술 관료주의 | |

| 초록 |

본 논문은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중심으로 환경정의 연구의 지형도를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올리히 벡이 ‘위험사회’ 담론을 통해 실론했듯 핵 위험은 국경과 계급을 초월하는 보편적 위협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실제 사고의 현장에서는 지역과 계급, 젠더와 종(species)의 위계에 따라 위험이 차등적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환경 부정의가 작동해 왔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체르노빌 연구를 분배·절차·인정 정의라는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하여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우선 환경정의 연구는 원전 편익과 방사능 오염 부담의 불균형을 다루는 ‘분배 정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어 구소련 당국의 정보 은폐와 테크노크라시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절차적 정의’ 논의가 심화했다. 최근에는 미래 세대로의 위험 전가를 문제 삼는 분배 정의의 확장과 더불어, ‘체르노빌인’이라는 낙인 및 타자화, 그리고 비가시적으로 축적되는 ‘느린 폭력’을 규명하는 ‘인정 정의’ 연구로 그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imbaessi@pusan.ac.kr

나아가 본 논문은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기존 환경 정의론이 원전 사고의 젠더 중립성이라는 외피 속에서 '젠더화된 취약성'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또 인간중중심적 인권 담론에서 비인간 자연/다종의 문제를 충분히 포착해 왔는지 점검한다. 끝으로 체르노빌이라는 만성적 위기 속에서 성장과 효율의 논리가 아닌 생명, 돌봄, 공존의 윤리를 회복하는 환경 정의론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체르노빌 원전 사고, 환경정의, 에코페미니즘, 느린 폭력, 교차성, 다종 정의

1. 머리말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에서 현대 사회의 위험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성격을 띤다고 주장한다. 현대문명이 직면한 위험은 방사능이나 미세플라스틱처럼 감각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비가시성을 띠며, 국경을 초월해 전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인간의 예측과 통제 범위를 쉽사리 벗어난다는 것이다(Beck, 1992). 이러한 위험의 특징을 가장 응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였다. 그 결과는 가공할 만한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를 초래했다.

여태껏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한 모든 고통과 곤궁, 폭력은 '타자'라는 범주(유대인, 흑인, 여성, 난민, 반체제 인사, 공산주의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울타리, 수용소, 도시 구역, 군사 구역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실제적이거나 상징적 경계인 타자들의 사망 벽이 존재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듯 보이는 사람들은 이 벽 뒤로 몰려나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체르노빌 참사 이후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타자'의 종말이요, 우리가 애지중지해 왔던 모든 '거리 두기 가능성'의 종말을 의미한다. 핵 오염에 직면하여 체감하게 된 것이다. 곤궁은 경계를 지을 수 있으나 핵 시대의 위험은 경계 지을 수가 없다(Beck, 1992: 41).

백의 말처럼, 체르노빌 참사는 인종과 젠더, 종교, 정치색, 나이 등과 무관하게 인간을 ‘평등하게’ 죽이거나 병들게 했다는 점에서 ‘경계 없는 위험’을 초래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실제로 체르노빌 사고는 4호기 원자로 하나가 폭발한 것이었지만, 열흘간 이어진 화재로 요오드와 세슘 등 200여 종의 핵물질이 기류를 타고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이때 퍼진 방사성 물질의 양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당시 방출된 양보다 적게 잡아도 400배 이상이었다(Kinly, 2006: 10). 안전한 핵이라고 자부하던 원자력발전소가 핵무기보다 더 큰 피해와 위력을 드러내며, ‘평화적 핵’과 ‘군사적 핵’이라는 이분법의 한계를 여실히 폭로했다. 결국,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방사선 사고 등급제에서 최고 단계인 7등급으로 평가되며, 현대 인류가 겪은 가장 심각한 핵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위험’이라는 진술이 성립하는 범위와 방식은 더 세밀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른바 ‘핵 위험의 민주화’라는 백의 주장은 핵 재난이 현대문명의 근간을 뒤흔드는 보편적 위협임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런 핵 재난의 보편성 담론은 자칫 위험의 ‘물리적 확산’과 그 위험을 ‘감당하는 사회적 능력’을 뒤섞어 재난의 정치학을 탈정치화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혼동할 때 보편성의 언어는 재난을 둘러싼 권력관계를 비가시화하는 효과를 낳는다(Nixon, 2011: 5). 차원이 다른 핵 참사의 물리적 영향은 가히 무차별적이었다 해도, 실제 사고의 현장에서는 지역과 계급, 젠더, 종(species) 등에 따라 위험을 전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거리 두기’의 경계가 엄격히 작동한다. 초기 연구들은 체르노빌을 인류 공동의 비극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그 비극이 누구의 몸을 통해 구체화되고 어떤 구조 속에서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보편성이라는 수사 뒤에 숨어 특정 집단에게 위험의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환경 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를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체르노빌을 둘러싼 환경정의 연구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환경정의 연구는 환경 문제가 단지 '자연 보호'나 '오염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누가 피해를 떠안고 누가 이익을 얻는지(분배의 정의), 누가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는지(절차의 정의), 어떤 존재가 애초에 '가치 있는 주체'로 인정되는지(인정의 정의) 등이 핵심 쟁점이 된다(Coolsaet, 2020: 143).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주로 연구가 쓰리마일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의 사고가 촉발한 위협과 피해 부담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같은 '분배 정의' 문제에 집중했다면, 이후에는 '공정한 대우와 의미 있는 참여'라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환경정의가 널리 인용되면서 핵시설·핵폐기물 부지선정에서 '절차적 정의'의 문제가 연구의 중심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불평등이 결국 단순히 자원의 분배 문제를 넘어 문화적·사회적 무시에서 비롯된다는 인정 정의의 영역으로 그 외연을 넓히고 있다(Kyne & Bolin, 2016).

이 글은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을 축으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관한 환경정의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되, 기존 연구가 무엇을 밝혀 왔는지뿐 아니라 특히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무엇을 상대적으로 덜 포착했는지도 점검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 비인간 생명체를 비롯한 다종간 정의를 주장하며 가부장제와 발전주의(성장주의), 식민주의, 인간중심주의, 과학기술주의를 비판하는 한편, 인간과 자연 간의 유기적 관계성을 회복하고 성장과 효율이 아니라 생명, 돌봄, 공존의 윤리를 중시한다.¹⁾ 이러한 관점에서 에코페미니즘은 환경 부정의, 곧 오염·유해물질·위험시설·기후재난 등의 환경 피해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

1) Karen J. Warren, 2000, *Ecofeminist Philosophy: A Western Perspective on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Greta Gaard ed., 1993, *Ecofeminism: Women, Animals, Natur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Val Plumwood, *Feminism and the Mastery of Nature*, London: Routledge; Maria Mies and Vandana Shiva, 1993, *Ecofeminism*, London: Zed Books 참조.

층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특정 집단과 비인간 자연에 불균등하게 부가되는 구조를 지적한다(Plumwood, 1993).

실제로 환경정의 연구는 환경 문제가 단순히 '환경 오염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과 계급 등의 권력관계와 결부된 '사회 정의의 문제'임을 정교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젠더 문제를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환경 오염과 기후 후 위기, 각종 재난이 젠더 중립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가공할 만한 방사능 피폭 앞에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은 무의미해 보인다. 하지만 인종 및 계급과 마찬가지로 젠더를 포함하여 그 교차성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원전 사고를 비롯한 각종 재난 연구와 정책은 남성이 인간 모두를 대표하는 것처럼 일반화되어 여성 고유의 경험과 위험이 지워져 버릴 것이다.

한편, 기존 환경정의 연구는 '정의'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주로 접근한다. 환경정의는 대체로 '인간의' 환경적 정의일 뿐, '환경의' 정의나 아니면 적어도 '환경을 위한' 정의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환경불평등을 비판하고 다양한 비주류의 환경권을 수호하지만, 원전 사고의 가장 큰 피해 주체인 자연을 비주류 가운데 한 존재로 충분히 사유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과 환경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둘의 공존과 상호 돌봄의 관계성을 회복하려는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이 요청된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 '모든 인간'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지구 생명체'의 안전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본고의 목적은 체르노빌 이후 축적된 환경정의 논의를 에코페미니즘이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환원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체르노빌을 둘러싼 연구가 어떤 경로로 분화·심화되며 연구 지형을 형성해 왔는지, 그리고 그 지형의 틈새에 어떤 공백이 남아 있는지를 드러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관련 환경정의 논의를 분배, 절차, 인정이라는 세 축으로 나누어 그 핵심 주제와 쟁점을 짚어본다.²⁾ 이를

통해 핵 재난의 피해가 '보편적'으로 확산한다는 진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위협의 불평등한 전가와 의사결정의 배제, 타자화 및 비가시화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왔는지를 연구사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형도 위에서, 기존 논의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해 온 젠더화된 취약성과 인간/비인간의 위계를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체르노빌 이후 환경 정의론이 확장될 수 있는 이론적 접점(교차성·다중정의·상호 돌봄)을 모색해 볼 것이다.

2. 분배 정의 연구: 위협의 불평등

분배 정의는 환경적 편익과 부담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배분되는가에 주목하며, 특히 위협이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부정의를 지적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주류 환경주의가 백인 중산층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유색인종과 빈곤층이 직면한 생명 및 건강의 위협을 장기간 외면해 왔다는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로버트 불라드(Robert Bullard)는 환경 문제가 단순히 '오염'의 차원을 넘어 그 피해가 특정 인종이나 계층에 편중되는 사회적 역학으로 분석했다. 실증적 데이터를 토대로 폐기물 매립지, 소각장, 화학 공장과 같은 유해 시설이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입증했다(Bullard, 2000). 즉, 산업 발전의 혜택은 사회 전체가 누리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질병이라는 비용은 가난한 유색인종 공동체가 전담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폭로한 것이다. 앨리스 마(Alice Mah) 또한 현대 사회를 유해한 매립지와 산업 현

2) 본고는 해외 연구에 집중하여 체르노빌 환경정의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깊이 있게 고찰한 연구나 원전 문제에 중점을 둔 환경정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두 주제를 결합하여 환경정의의 틀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본 논문의 논의를 전개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된 국내 연구들은 참고문헌으로 언급해 둔다.

장이 도처에 널린 “유독성의 세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유독성이 현대성의 특징임을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독성 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층 및 소수자 공동체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Mah, 2020: chap. 10).

원자력 발전 역시 이러한 분배 부정의의 연장선에 있다. 원전의 이익은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반면, 핵연료의 채굴, 농축, 운송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 위험은 발전소 인근 주민과 특정 소외 지역에 불균등하게 집중된다. 특히, 고준위 폐기물 영구 처분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폐기물이 각 발전소 부지에 임시 저장되는 현실은 인근 공동체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이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Xiang & Zhu, 2011: 3-4). 스테파니 말린(Stephanie Malin) 역시 ‘에너지 불평등’이라는 용어로, 원자력 편익은 널리 향유되는 반면 위험과 비용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가난한 공동체에 편중된다는 점을 부각했다(Malin, 2015: 24-28). 이처럼 분배 정의 연구의 핵심은 ‘환경 부담의 불평등’을 실증하고, 그 편중이 제도·권력·경제구조와 맺는 관계를 드러내는 데 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둘러싼 분배 정의 연구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위험을 발생시킨 주체와 피해를 감내하는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지리적·사회적 불균형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거론된다. 크리스틴 슈레이더-프레철헤(Kristin Shrader-Frechette)은 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었으나, 실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곳은 벨라루스였음을 지적한다. 또한 전체 사망 및 부상 인원 절반 이상이 구소련 외부인 유럽 등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Shrader-Frechette, 1999: 71). 스웨덴 사례에서 보듯, 사고 주체로부터의 보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접국이 피해만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구조는 환경 부정의가 국제적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에머라 아큐즈(Emrah Akyüz)는 분배 정의를 ‘산업 사회의 부담이 공동체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는지에 관한 문제로 정의한다(Akyüz, 2021:

370). 가령, 체르노빌 원전 반경 30km 이내의 '출입금지구역(exclusion zone)'에 거주하던 11만 6천 명의 주민이 강제 이주를 당해 고향과 재산을 잃은 반면, 그 구역 밖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기를 사용하며 혜택을 누리는 지리적 분배의 불평등을 지적한다(Akyüz, 2021: 371-373). 나아가 요한나 회프켄(Johanna Höffken) 등은 원자력 산업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공동체에 위협을 전가하는 '주변화' 과정을 분배 부정의의 본질로 본다. 예를 들어, 사고 수습에 투입된 80만 명의 '사고 수습 노동자(liquidator)'들이 적절한 보호 장비나 정보 없이 고선량 방사능 위협을 전담한 것은 가난한 노동계급에게 생명 위협이 집중된 심각한 분배 정의의 실패로 제시된다(Höffken & Ramana, 2024: 4).

체르노빌 분배 정의 연구에서 특히 주목받는 쟁점 중 하나는 세대 간 분배 문제다. 거의 모든 환경 담론이 미래 세대에게 미칠 환경 오염의 악영향을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지만, 원전 사고는 방사능 오염의 반영구성과 가공할 만한 파괴력 때문에 아동은 물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전면에 배치된다.

우선 연구자들은 아동의 생물학적 취약성을 지적한다. 슈레이더-프레철헤트는 아동이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고 해독 체계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 성인보다 오염 물질에 약 10배 더 민감하고 특히 영아가 동일한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갑상선암 발생 위험은 성인보다 33~39배나 높다는 사실을 증명했다(Shrader-Frechette, 2010: 4). 또한 린 바넷(Lynn Barnett)은 방사능 노출이 태내 발달 단계에 따라 인지 장애, 지능 지수 저하, 정서 장애를 유발했을 뿐 아니라 갑상선암 같은 병에 걸린 아동들이 PTSD 등 정신 질환도 성인보다 더 많이 겪는다고 보고했다(Barnett, 2007: 53-54).

다음으로 현재 세대의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에 보상 불가능한 짐을 지우는 부정의 문제를 짚는다. 상(H. Xiang)과 주(Y. Zhu)은 핵폐기물이 수십만 년 동안 방사능을 유지하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매년 고준위 폐기물이 발생해 미래 세대가 되

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를 떠안는 세대 간 부정의를 강조한다(Xiang & Zhu, 2011: 6-7). 딘 카인(Dean Kyne)과 밥 볼린(Bob Bolin) 등은 이에 더해 핵시설 사후 관리와 석관 처리 비용이 미래 세대로 전가되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전력 혜택(현재) 대신 관리 부담(미래)이 '상속'된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세대 간 부정의 문제를 제기한다(Kyne & Bolin, 2016: 522-523; Höffken & Ramana, 2024: 470). 아큐즈는 환경권 침해의 차원에서 논의하며,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음에도 현세대의 기술적 결정과 사고의 여파로 그 권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박탈된다고 역설한다(Akyüz, 2021: 373-374).

이처럼 체르노빌 분배 정의 연구는 지리, 계급, 세대라는 중요한 쟁점을 통해 환경불평등의 양상을 예리하게 해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피해의 비대칭적 분포에 주목했을 뿐,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 시스템 자체를 더 근본적으로 문제화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찰스 페로(Charles Perrow)는 원전 사고를 기술적 구조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상 사고(normal accident)'의 전형으로 제시한다. 즉, 원전 시스템은 복잡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결합 구조로 인해 사소한 고장이나 작은 실수로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 예측 불가능한 대참사로 비화할 고도의 위험 집약체라는 것이다(Perrow, 1984). 따라서 원전 시스템에 내재된 구조적 취약성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은, 사고 이면에 도사린 구조적 불평등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인종주의'와 '환경불평등' 같은 환경정의 이전 개념에서 알 수 있듯, 체르노빌 연구 흐름은 오랫동안 인종과 계급을 분석 도구로 활용해 온 반면, 젠더를 분배 부정의의 핵심 범주로 충분히 조직화하지는 못했다. 슈레이더-프레철티엄, 국제 방사선 보호 표준이 20~30대 백인 남성을 모델로 한 '기준인'에 맞춰져 있음을 비판하며, 이 모델이 방사능에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받는 아동과 여성의 생물학적 취약성을 간과했음을 지적한 학자도 없지 않다(Shrader-Frechette, 2010: 5). 하지만 이

러한 논의조차 생물학적 차이에 집중했을 뿐, 사회구조적 관점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분배 정의의 핵심 요소로 완전히 통합하지는 못했다.

셰릴린 맥그리거(Sherilyn MacGregor)는 젠더를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범주가 아니라 환경정의를 파악하는 핵심적인 분석 렌즈로 제시한다. 젠더는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력과 자원에 대한 접근권,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기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MacGregor, 2020: chap 18). 실제로 여성은 젠더 불평등한 상시적 조건으로 인해 환경 재난 국면에서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특히 빈곤과 인종차별이 중첩된 위치에 있는 여성은 자연재해로 인명피해를 입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Neumeyer and Plümper, 2007). 따라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위치 때문에 고유한 환경적 부정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Unger, 2008: 115).

환경정의 담론에서 젠더 관점이 요구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젠더 취약성'(gendered vulnerability)이다. 이는 여성의 본질적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관계의 역학 속에서 자원·안전·시간·이동성·의사결정권 등이 차등적으로 배분됨으로써 취약성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현상을 뜻한다(Enarson, 2000: 49 - 50). 그리고 이러한 젠더 취약성은 재난이 일어난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성별화된 삶의 조건이 위기에서 증폭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환경 재난 시 여성은 식량, 연료, 물 확보의 1차 담당자로서 환경 훼손에 따른 이동 거리 증가와 신체적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된다. 재난 구호 시설조차 임신부나 수유부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간과하거나 재난 이후 증가하는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안전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은, 환경적 위협의 분배가 사회구조적 젠더 불평등과 어떻게 결합되어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지 보여준다(Enarson, 2000: 52-54).

체르노빌의 경우에도 사고 후 가정 폭력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재정착과 생활 환경 변화, 가족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여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

이 가중된 상황을 감안하면(Alexis-Martin, 2015), 사고 전 젠더 불평등이 사고 후 더욱더 심화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난민 어머니들은 PTSD와 우울증, 심리적 고통을 겪는 비율이 더 높았고(Adams et al., 2011: 640-641),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장기간 고위험군으로 남았으며, 그 주요 요인은 자녀 건강에 대한 지속적 공포였다(Bromet, Havenaar, and Guey, 2011: 6). 즉,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존재로 구성되는 젠더 규범이 체르노빌 이후 여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동시에 그 고통은 종종 사적인 영역, 곧 어머니의 불안, 가족 걱정으로 환원되어 공식 인정에서 배제될 위험이 컸다. 결국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야기하는 분배 부정의는 단지 '사고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젠더를 비롯한 다양한 불평등이 재난을 매개로 가속화·재배치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분배 정의 연구들은 체르노빌 사고의 위험이 국경과 세대를 넘어 어떻게 불평등하게 투사되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 냈다. 그러나 주로 인종이나 계급, 지리적 위치라는 변수에 집중함으로써, 사회구조의 기저에 흐르는 젠더 역학이 (그리고 중첩된 불평등 구조가) 위험의 배분과 수용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포착하지는 못했다. 분배 불평등은 단순히 결과의 치우침이 아니라, 누가 위험을 정의하고 배분할 권력을 가졌는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분배의 부정의를 가능하게 한 의사결정 구조의 비민주성과 정보독점의 문제를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3. 절차적 정의 연구: 정보독점과 기술관료주의

분배 정의 연구가 위험의 결과적 배분에 집중해 왔다면, 절차적 정의 연구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라는 정치적 메커니

증을 분석의 핵심으로 삼는다. 특히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고위험 기술 재난에서 절차적 정의는 정보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의 실질성, 기술주의적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분석 틀로 기능해 왔다. 초기 연구는 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외된 공동체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주목했으나, 점차 지식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의 권력 역학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폭이 확장되었다. 절차적 정의는 단순히 참여자의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내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당한 처사에 대한 사법적 구제 권한을 보장하는 것임을 강조한다(Suiseeya, 2020: chap 4).

원전처럼 고위험·고전문성 기술 영역에서는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진다. 위험은 비가시적이고, 판단에는 특수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비상사태에서는 정보의 속도와 정확성이 생존을 좌우하는 탓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정보의 독점과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가 결합하면, 절차적 정의는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곧 원자력 산업은 소수 전문가 그룹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기술주의적 폐쇄성을 띠며, 이는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절차적 부정의로 이어진다.

연구자들은 체르노빌 이전과 이후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공통된 양상을 추적해 왔다. 대표적으로 1979년 발생한 처치 록 Church Rock) 우라늄 유출 사고를 다룬 누를 하산(Nurul Habibah Nor Hassan)은 핵 정책이 소외된 공동체에 미치는 절차적 장벽을 상세히 규명한다. 사고 당시 현지 주민들과 나바호(Navajo) 부족 당국은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러한 '지연된 통지'는 주민들이 오염된 강물을 가축용이나 개인용으로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나바호 부족은 우라늄 공장 운영이나 위험 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 권한을 거의 갖지 못했다(Hassan, 2025: 46-50). 이러한 연구는 핵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 당사자의 대표성 부족이 공동체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절차적 부정의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정보 소외는 노동 현장에서도 발생한다. 슈레이더-프레젓은 미국 당국이 원자력 관련 노동자의 개인별 공기모니터기(personal-radiation air monitors)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실제 노출량을 최대 1,000배까지 과소평가함으로써, 관련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미칠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동의하는 ‘사전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Shrader-Frechette, 2010: 5-6). 상과 주 역시 정부와 산업계가 원자력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사고 시 즉각적 정보 공유와 대처 교육은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줄이는 필수적인 절차적 권리라고 강조한다(Xiang & Zhu, 2011: 4). 다시 말해 핵사고의 피해는 ‘폭발’과 ‘누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지연·왜곡·침묵이라는 절차적 실패가 결합할 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원전 사고는 ‘기술의 실패’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실패’인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체르노빌 사고는 국가 권력이 정보를 독점했을 때 발생하는 절차적 실패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사례로 연구되어 왔다. 그래서 체르노빌에 관한 절차적 정의 연구의 중심에는 ‘정보의 불투명성’과 ‘국가의 알 권리 침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구소련 체제의 폐쇄성과 기술주의적 오만이 결합하여 일어난 정보의 왜곡은 사고 수습 과정 전반을 부정의로 점철시켰다는 것이다.

우선, 정보의 은폐와 지연된 보도를 문제 삼는다. 사고 초기 소련 당국은 체제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확한 방산능 수치와 낙진 경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시민들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소련 당국이 사고 발생 사실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데 18일이나 걸렸으며(Petryna, 2011: 30), 주요 언론들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거론된다(Anisimov & Ryzhenkov, 2016: 270-271). 베키 알렉시스-마틴(Becky Alexis-Martin)은 이러한 체르노빌의 핵심 메커니즘을 ‘비밀주의’로 정리한다. 소련 당국은 정치적 이유로 비상사태 선포를 지연했고, 사고의 규모를 축소하는 짧은 뉴

스만 제공하여 정보를 통제했다는 것이다(Alexis-Martin, 2015: 2-3). 아드리아나 페트리나(Adriana Petryna)는 소련 정부가 방사선 노출에 대한 '비밀 지침'을 내려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했으며, 기록에서 '방사능' 관련 언급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인과관계 증명을 방해한 것도 밝혀냈다(Petryna, 2002: 43).

이러한 정보 접근권의 박탈이 더 큰 비극을 초래했음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다. 사고 직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주민들이 요오드제 복용과 같은 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할 기회를 앗아갔으며, 결과적으로 예방가능했던 아동의 갑상선암 등을 야기했다는 사실을 짚었다(Petryna, 2002: 77). 또한 약 80만 명의 '사고 수습 노동자'들은 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불투명한 체제가 낳은 비극적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Alexis-Martin, 2015: 3-4). 당국이 상황의 정상성을 과시하기 위해 노동절 퍼레이드 축제를 강행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방사선에 추가로 노출시켰다는 점도 지적되었다(Anisimov & Ryzhenkov, 2016: 271). 이렇게 국가의 정보 독점 및 은폐는 특정 계급의 신체를 국가적 위기 극복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도구로 만들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할 기회를 박탈해 참사를 더욱더 키웠다는 것이다.

체르노빌 이후의 심리적·사회적 후유증을 분석한 연구 또한 정보 통제에의 결과를 강조한다. 바넷은 체르노빌의 핵심 영향을 신체질환보다 정신건강에서 찾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 배경으로 위협에 대한 부실한 소통, 정부/산업체의 정보 은폐와 지연, 잘못 관리된 대응이 공포와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점을 든다(Barnett, 2007). 에브린 브로멧(Evelyn J. Bromet) 등도 사고 초기 오도된 정보와 모순된 보도가 주민들의 자기 보호 기회를 가로막고, 정부 불신과 장기적인 심리적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Bromet, Havenaar, and Guey, 2011: 2).

피해 규모의 축소와 과학의 도구화 문제에서 국제기구의 역할 역시 쟁점이 된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 등 원자력 산업과 이해관계를 같이하

는 기관들은 사고 사망자를 대폭 축소 집계하여 피해를 의도적으로 과소 평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hrader-Frechette, 1999: 71-72). 또한 IAEA가 주민들의 신체적 고통을 방사선 노출보다는 ‘방사선 공포증’(radiophobia)과 같은 비합리적인 심리적 불안 탓으로 돌림으로써 실제 피해를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한다(Petryna, 2011).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는 ‘사실의 은폐’뿐 아니라 ‘프레임 독점’을 통해 피해자의 경험과 요구를 무력화하는 권력 작동으로 읽힌다.

끝으로 체르노빌 연구들은 국가와 과학 기술 관료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 참여를 배제하는 ‘테크노크라시적 의사결정’을 비판한다. 가령,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가 도입한 단일 단계 면허 절차나 공청회 참여를 위한 짧은 기한과 막대한 법적 비용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된다(Kyne & Bolin, 2016: 6-7). 매튜 코튼(Matthew Cotton)은 기술적 권위주의에 기반한 ‘결정-발표-방어’ 식의 전통적인 핵 정책 결정 방식이 환경 부정의를 재생산한다고 비판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평등하게 토론에 참여하는 ‘정치적 평등’의 실천을 요구한다(Cotton, 2020: 216-217).

이처럼 체르노빌에 관한 절차적 정의 연구는 기술주의 전문성의 최첨단을 보여주는 원자력 정책 결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배제와 구조적 주변화 문제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규명해 왔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젠더화되어 있고, 그 참여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조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체르노빌의 절차적 정의 연구의 경우에도, 젠더 관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환경정의 논의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젠더 접근을 요구하는 연구는 기존 절차적 정의 논의가 정보 접근권이 나 투표권 같은 형식적 절차 개선에만 머물러 젠더화된 권력 역학을 간과해 왔음을 지적한다. 우선, 정책 결정 기구에서의 여성 과소 대표성을 문제 삼는다. 수반카르 만달(Subhankar Mandal)은 구조적 문제를 회피한 채 기술적 처방과 시장기제 중심 해결이 강화되면서, 여성·유색인종·원주민 등 대표성 낮은 집단이 리더십과 의사결정에서 배제된다고 강조한다.

그 결과, 현지의 지식과 여성의 경험을 배제한 기술 중심의 사고 수습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환경 부정의를 생산한다는 것이다(Mandal, 2025: a840 - a841). 나아가 과학적 전문주의와 젠더 위계도 문제다. 과학적 전문주의가 전문가(남성/권력자)와 비전문가(여성/약자)라는 이분법적 위계를 형성하여, 피해 당사자 여성들의 목소리를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Plumwood, 1993; Vangeli, 2023/2024).

이런 절차적 부정의의 근저에는 역시 젠더화된 취약성이 놓여 있다. 자원, 안전, 이동성에서의 불평등은 여성이 환경적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물리적·시간적 여유를 갖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참여 기회 부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에 엘레인 에너슨(Elaine Enarson)은 여성 단체들과 네크워크가 재난 회복력의 촉매제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비공식적 리더십을 공식적인 정책 결정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Enarson, 2000: 193). 결국, 절차적 정의 연구는 '정보 공개와 참여'라는 형식적 틀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젠더화된 지식 위계와 대표성 구조를 함께 해체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배제는 필연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을 공식적인 담론에서 지우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다음 4장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실패가 어떻게 특정 집단의 정체성과 경험을 타자화하고 그 피해를 비가시화했는지, '인정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4. 인정 정의 연구: 비가시적 폭력과 낙인, 타자화

최근 환경정의 연구의 지평은 위험 분배 불평등과 절차적 배제의 기저에 흐르는 더 근본적인 층위인 '인정 정의'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특정 집단의 정체성·삶의 방식·경험·지식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받

아들여지지 않는 한, 재분배나 참여 확대는 형식적 조치에 그치기 쉽다. 이에 인정 정의의 연구는 ‘누가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존중받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며, 특정 집단의 정체성과 그들 고유의 생활 방식 및 지식 체계가 지배 담론에서 어떻게 삭제되거나 왜곡되는지를 규명해 왔다.

연구의 출발은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과 지식 체계를 존중하는 문제였다. 예컨대 스탠딩 록의 #NoDAPL 운동에서 원주민은 물을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성스러운 ‘친족’ 관계로 이해했고, 시위의 목표는 오염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사물화하는 지배적 논리를 거부하고 관계적 세계관을 인정하라는 요구였다(Holland, 2020: chap 6). 이 사례는 인정 정의가 ‘피해 인정’뿐 아니라, 원주민의 삶과 문화 그 자체를 인정하는 정의권과 연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연구는 인정 정의를 ‘환경 식민주의’와도 연결한다. 카인과 볼린은 나바호 영토에서 대규모 우라늄이 채굴되고 주민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곳을 ‘황무지’로 간주함으로써 개발을 정당화하고 원주민의 삶과 고통을 무시했음을 지적한다(Kyne & Bolin, 2016: 8-10). 마찬가지로 넬타 에드워즈(Nelta Edwards)는 식민 강대국과 핵 산업계가 핵 실험이나 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상 지역을 의도적으로 ‘낙후된’, ‘텅 빈’, ‘인구가 희박한’ 곳으로 묘사해 왔다고 비판한다(Edwards, 2011: 109-110). 또한 식민 권력이 ‘다수의 보호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정당하다’는 공리주의적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는 정작 희생을 강요받은 당사자가 아닌 권력자의 입장에서 주창된 기만적 논리라고 일갈한다(Edwards, 2011: 112). 이로써 인정 정의는 문화 존중의 차원을 넘어, ‘어떤 삶은 보호할 가치가 있고 어떤 삶은 희생 가능하다’는 위계가 생산되는 기제를 밝히는 연구로 확장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인정 정의의 연구는 비주류가 경험하는 비가시화, 낙인, 타자화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로 지평을 넓혀 왔다. 우선 비가시화의 문제는 롭 닉슨(Rob Nixon)이 제안한 ‘느린 폭력’(Slow Violence)의

개념과 결합해 심화된다. 기후 변화와 독성 물질의 축적, 삼림 파괴 같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느린 폭력'은 눈에 띄지도 않고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기에,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망각' 속에서 더욱더 사라진다는 것이다(Nixon, 2011). 제임스 라이스(James Rice)는 DDT 등 합성화학물질 문제를 다루며 이 논의를 '시간'의 정치로 확장한다. 위험의 노출과 결과 발현 사이의 시간적 간극은 위험이 일상화되어 문제를 문제로 인식되지 않게 만들며, 지배층은 이런 약한 신호를 이용해 의심·회피·부정을 조장할 여지가 커진다고 지적한다(Rice, 2016: 177-178).

이런 '느린 폭력'은 원전 사고 이후의 피해와 영향을 다층적으로 해석하는데 적합한 개념이었다.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이나 유전적 변이, 정신적 피해는 즉각적인 폭발 사고와 달리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며 시공간적으로 흩어져 존재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재난의 특성이 피해의 인정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파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르노빌의 여파는 국가의 공식 통계나 보상 체계에서 누락되기 십상인 탓이다. 이러한 비가시성은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입증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재난의 책임을 개인의 질병이나 불운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구조적 부정의를 생산한다.

따라서 체르노빌의 인정 정의 연구는 단지 폭발 순간이 아니라 사고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생물학적·사회적 침전 과정이야말로 재난의 본질임을 강조한다. 바넷은 체르노빌 트라우마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누적 스트레스"로서, 강제 대피, 재산·직업 상실, 사회적 네트워크 붕괴, 실업과 빈곤, 보건의료 체계 붕괴, 안전한 음식에 대한 혼란, 기형아 출산 공포, 보상 미이행 등을 포함하는 사회구조적 스트레스라고 역설한다(Barnett, 2007: 47 - 48). 에릭 코졸라(Erik Kojola)와 데이브드 펠로우(David N. Pellow)는 체르노빌의 비가시적 해악은 방사선 노출이라는 물리적 손상만이 아니라, 공포와 무시가 공동체 전체에 장기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심리적 고통을 남기는 방식으로도 작동한다고 주장한다(Kojola &

Pellow, 2021: 116-117). 이처럼 인정 정의의 렌즈는 체르노빌을 수치로 환원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의미·관계·기억을 파괴하는 폭력으로 복원한다.

에카테리나 주코바(Ekatherina Zhukova)는 느린 폭력에 더해 ‘만성적 위기’라는 틀로 환경 재난을 일시적 사건이 아닌 인간 삶의 조건으로 바라보며, 재난 이후의 삶이 불평등을 변혁하기보다 오히려 재생산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Zhukova, 2020). ‘느린 폭력’이 비사건화와 가시성 소거를 강조한다면, ‘만성적 위기’는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의식하며 선택하고 행동하는 행위자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Zhukova, 2020: 590). 체르노빌 피해자들의 삶은 바로 이 두 층위, 곧 비가시화되는 고통과 그 속에서 살아내는 실천 사이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인정 정의가 다루는 또 다른 핵심은 낙인과 타자화다. 전문가 집단이 부여하는 ‘과학적 낙인’과 일반인이 부여하는 ‘사회적 낙인’이 환경적 부정의를 강화했다(Zhukova, 2020). 브로멧 등은 체르노빌 피난민들이 오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주지에서 일반 대중, 심지어 의료계로부터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경험했다고 제시한다(Bromet, Havenaar, and Guey, 2011: 2). 사고 지역 주민들은 ‘체르노빌인’(Chernobylites)이라는 별칭으로 묶이며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차별받았고(Akyüz, 2021: 373), ‘체르노빌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흔히 ‘비정상’ 혹은 ‘지체’라는 사회적 낙인을 동반했다(Zhukova, 2020: 598).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신체적 질병보다 더 깊은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이들이 정당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즉 방사능 오염은 물리적 상태인 동시에 사회적 결격의 표지가 된 것이다.

페트리나는 체르노빌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과 치료를 받기 위해 자신의 손상된 신체를 증명해야만 했던 과정을 ‘생물학적 시민권’(Biological Citizenship)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한다(Petryna, 2002). 구 소련 붕괴 이후 경제적 위기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보상을 받기 위해

서는 엄격한 의료적·관료적 기준을 통과하여 '피해자'임을 공인받아야 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건강 상태와 생물학적 지표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은, 국가가 인간의 존엄을 온전하게 인정하기보다 도구적인 보상 체계 안에 가두어 두었음을 드러내는 인정 정의의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주코파는 인정과 낙인의 역설을 포착한다. 국제 과학계가 갑상선 암만을 직접적 인과관계로 인정하며 피해의 범위를 제한할 때, 생존자들은 기관지염이나 천식, 부인과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체르노빌과 결부하여 협소한 과학적 정의에 도전한다. 동시에 사회적 낙인이 가해질 때면 스스로가 '정상'임을 피력하며, 외부에서 규정한 피해자 정체성을 거부하고 존엄성을 지키려 한다(Zhukova, 2020: 600-602). 여기서 인정 투쟁은 역설적이다. 피해자라는 '라벨'을 수용하면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 편견에 걸러지고, 이를 거부하면 정상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통을 축소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결국 만성적 위기는 개인적·과학적·대중적 의미가 끊임없이 길항하며 공존하는 상태로 나타난다(Zhukova, 2020: 596).

이런 인정 정의 연구는 젠더 문제와 맞물릴 때 한층 더 날카로워질 수 있다. 체르노빌 사고 피해에서 여성의 고유한 고통과 피해는 비가시화되기 십상인 탓이다. '환경정의'라는 범주에서 체르노빌 여성의 경험을 다룬 연구는 극히 부족하지만 사고 피해와 고통이 젠더화되며 희석된 사실을 규명한 연구는 적지 않다.

줄리 츠위켈(Julie Cwikel) 등은 체르노빌 이후 이스라엘로 이주한 여성들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실제 가임력 감소·난임 치료 증가 같은 반대 증거를 통해 저선량 노출이 가임력에 영향이 없다는 국제기구의 결론을 반박한다(Cwikel et al., 2020: 6-7). 또한 사고 직후 오염 지역 여성들이 기형아 출산 불안 속에서 높은 비율로 임신 중지를 선택했고, 유럽 각 지에서도 임신 중지나 임신 연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방사능 공포가 여성의 재생산 결정권을 어떻게 압박했는지를 보여준다(Cwikel, 2020: 2-3).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 현장의 비가시성은 사고 후 더욱 두드러진다. 조반나 디 키로(Giovanna Di Chiro) 등은 재난 이후 오염된 식재료를 선별하고, 가족의 건강을 챙기며, 이주 후 파괴된 일상을 재건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재생산 노동'이 환경적 피해나 기여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비판한다(Di Chiro, 2020; Enarson, 2012; MacGregor, 2017). 여성들은 방사능 위험의 최전선에서 '끝나지 않는 일'을 수행하며 가장 밀접하게 오염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은 공적 영역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가시적 폭력 아래 놓여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젠더와 결합했을 때, 인정 정의 연구가 얼마나 깊이를 더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

체르노빌 사고에 관한 인정 정의 연구는 환경 부정의가 단순히 '무엇'을 덜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로서 존중받지 못했는가의 문제임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이 흐름이 성별화된 고통과 재생산권 침해, 젠더화된 낙인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인정받지 못한 또 하나의 존재인 자연의 문제를 다음 장에서 다뤄볼 것이다.

5. 에코페미니즘적 성찰: 교차성 · 다중 정의 · 상호 돌봄의 접속

이제 지금까지 고찰한 분배 · 절차 · 인정 정의의 성과를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환경정의 담론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특히 교차성, 다중 정의, 돌봄의 윤리라는 에코페미니즘의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체르노빌 환경정의 연구를 어떻게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을지 타진해 볼 것이다.

환경정의 연구는 198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워런 카운티(Warren County)에서 발생한 독성 PCB 매립지 반대 시위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Coolsaet, 2020: 1). 초창기 연구들은 주로 유색인종 공동체에 유해 시설

이 집중되는 '환경인종주의'를 고발하며, 불평등의 근본 동력이 인종인지 계급인지에 관한 학술적 논쟁을 전개했다(Kojola & Pellow, 2021: 102). 이런 흐름은 환경정의의 연구가 오염의 분배 문제를 사회구조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최근의 환경정의의 연구는 이러한 초기 연구의 토대 위에서 사회과학과 인문학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이론적 관여를 통해 환경적 부정의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보상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계급,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장애 여부, 토착성, 시민권 등 다양한 지배체제가 교차하여 환경 부정의를 양산하는 방식에 대해 더욱 폭넓은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Kojola & Pellow, 2021: 102).

그러나 본고의 체르노빌 논의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환경정의는 두 가지 공백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하고 있다. 하나는 교차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인종·계급에 비해 특히 젠더가 환경정의의 핵심 범주로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환경정의가 인종과 계급의 틀에 주로 갇혀 분석될 때, 재난의 젠더화된 취약성은 부차적 문제로 밀려나기 쉽다(Sze, 2017: 160-161). 다른 하나는 기존 환경정의가 인간 중심적인 정의에 머물며, 원전 사고의 최대 피해자인 '비인간' 존재의 주체성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분배 정의는 주로 가난과 인종을, 절차적 정의는 비주류의 배제를, 인정 정의는 원주민이나 피해자의 타자화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방사능 오염이 생태계 전반(토양·대기·동식물)에 남기는 장기적 손상을 '정의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재규정하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이 지점에서 에코페미니즘은 환경정의에 필요한 윤리적·존재론적 확장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에코페미니즘은 가부장제와 발전주의가 여성과 자연을 함께 지배하고 평가절하하는 구조적 산물임을 드러내며, 환경 문제를 단순한 오염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체계와 지배 논리의 문제로 재정의한다(Isla, 2017: 378-379). 따라서 체르노빌 이후의 환경정의가 분

배·절차·인정이라는 세 축을 넘어 젠더화된 취약성과 인간-비인간 관계의 위계를 동시에 쟁점화하기 위해서는 에코페미니즘적 정의 개념이 요청된다.

에코페미니즘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환경 부정의가 단일한 변수가 아니라 다양한 권력관계가 중첩되어 발생한다는 ‘교차성’ 이론을 도입한 것이다. 즉 젠더 불평등과 자연 파괴를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억압 구조가 얽힌 결과로 파악하고, 자본주의·과학주의·식민주의·인종주의·이성에 차별·종 차별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교차성 관점이 에코페미니즘의 핵심으로 자리했다(MacGregor, 2017: 1). 특히 환경 부정의는 상호 얽히며 증폭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에, 교차성을 놓치면 다중 억압 집단의 피해와 필요, 목소리가 환경 연구와 운동, 정책에서 지워질 위험이 있다(Malin & Ryder, 2018). 따라서 교차성은 단일 축 분석에서 보이지 않게 된 인간과 비인간, 곧 여러 범주가 교차하면서 더욱더 소외된 집단의 고통을 드러내는 강력한 비판 도구로 기능한다(Di Chiro, 2020: chap 24).

체르노빌 사례에서 교차적 분석은 피해자의 고통을 다층적으로 규명하게 한다. 환경 위기가 닥쳤을 때 피해나 고통이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권력과 특권의 불평등한 관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통이 가시화되지 않거나 기존의 취약성이 증폭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전 사고로 고향을 떠난 ‘가난한 노동계급 여성’은 경제적 자원으로부터의 소외(계급)와 가사 및 돌봄 전담(젠더)이라는 위치가 결합되어 다층적인 위험에 노출된다(Enarson, 2000: 48-49).

또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장기적인 심리적 영향을 조사하여 젠더 취약성과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관계를 증명한 연구도 있다(Adams et al., 2011; Bromet, 2014). 앞서 본 것처럼, 어린 자식을 둔 어머니는 아이 건강에 대한 공포로 정신 질환 유병률이 높지만, 리처드 애덤스(Richard E. Adams) 등의 연구에 따르면 실업 상태이거나 생활필수품이 부족한 경우

그 유병률은 훨씬 더 높아졌다(Adams et al., 2011: 641-642). 이는 젠더 규범과 가난, 경제위기가 겹칠 때 여성의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심화하는지 잘 보여준다(Bromet, 2014: 209). 게다가 질병과 경제적 빈곤은 가정 폭력, 이혼,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져 여성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다(Petryna, 2002: 191-214).

이처럼 에코페미니즘 정의 연구는 젠더화된 사회구조가 다른 권력 범주와 교차할 때 환경적 부정의가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더 정교하게 파헤칠 수 있다. 나아가 체르노빌에서 드러난 분배·절차·인정의 부정의를 다층적 권력관계의 산물로 재해석하며 '가장 소외된 위치의 경험'을 분석의 중심으로 이동시킨다(Pellow, 2020: chap 22).

에코페미니즘이 환경정의에 더하는 두 번째 핵심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확장, 곧 '다종 정의'(multi-species justice) 혹은 중간 정의(inter-species justice)로의 이동이다(Cooke, 2020; Gaard, 2017; Tschakert, 2021).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인간을 지배자로, 자연을 피지배자로 상정하는 위계 구조가 환경 파괴의 근원임을 지적한다(Plumwood, 1993; Vangeli, 2023/2024). 그런데 원전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인 자연을 주체적으로 상정하고 비주류 가운데 한 존재로 접근하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그간 '정의'의 문제를 인권이라는 틀 안에서 주로 조망해 온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예를 들어, 환경정의 담론에서 하나의 지향점으로 제시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경제' 또한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을 '자연 자원'으로 정의하고 생태계를 재화·서비스로 화폐화함으로써 새로운 수탈을 낳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런 '녹색화'는 그 유지 비용을 여성·아동·농민·원주민·자연 같은 "여성화되고 가치평가 절하된 것"에 전가해왔기 때문이다(Isla, 2017: 372-373). 이에 진정한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 예외주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적·공존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정의의 관점이 필요하다.

실제로 체르노빌 사고는 인간 외에도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을 위협에 빠뜨렸다. 잘 알려진 ‘붉은 숲’(Red Forest)을 비롯해 대기와 토양, 산림이 오염되면서 그곳에 살던 동식물이 피폭되었고, 강과 호수, 바다가 오염되어 물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수중생물도 피폭을 피하지 못했다(Chubina et al., 2023). 그런데 최근 미디어와 일부 환경 담론은 체르노빌 출입금지구역(CEZ)을 인간이 사라진 후 자연이 스스로 회복한 ‘에텐동산’ 혹은 ‘야생의 낙원’으로 묘사한다(Wilson, 2019; Kelsey, 2014: 68).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늑대와 멧돼지, 들소, 독수리, 사슴 등 야생동물 개체 수가 증가했음을 입증하는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Deryabina et al., 2015: R824-R826).

이러한 ‘재야생화’(Rewilding) 담론은 ‘인간 없는 자연 회복’이라는 낭만적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는 언뜻 인간의 오만을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인간중심적 시각에서 자연을 다시금 타자화하는 고도의 환경 부정의를 내포할 위험이 있다(Plumwood, 1993:163-164). ‘자연의 회복’이라는 수사는 인간이 가한 폭력을 가리는 면죄부로 작동할 위험이 있으며, 자연을 여전히 인간의 간섭 여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관찰 대상으로 타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 없는 ‘자연 회복 담론’은 방사능이 동식물의 유전적 변이와 생태계 사슬에 미치는 ‘느린 폭력’을 은폐한다. 다양한 생물들이 방사능 수치가 높은 지역에서도 생존하고 번식하고 있지만, 유전적 불안정성과 면역 기능 및 생식 능력 저하 등 방사능의 직격이 크게 줄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연구도 적지 않다(Møller and Mousseau, 2016; Evangelidou et al., 2014).

따라서 다종 정의는 인간과 비인간이 동시에 겪는 만성적 위기 속에서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명체의 안녕을 정의의 영역에 포함하고, 인간과 대등하게 자연의 피해와 권리를 정치적으로 재기입할 가능성을 연다. 나아가 다종 정의는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는 동시에 종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성으로 환경 정의론의 지향점을 변경한다(Tschakert, 2021: 4).

결국 에코페미니즘의 환경 정의론은 남성/여성, 인간/비인간과 같은 이분법적 위계 구조를 비판하며, 환경정의와 상호 돌봄의 윤리가 결합한 가치를 추구한다. 다시 말해, 지배·정복·고립의 서사를 해체하고 관계적 사유를 통해 상호의존·돌봄·공존을 생존의 조건으로 재규정함으로써, 환경정의를 '권리의 분배'에만 묶어두지 않고 '관계의 재구성'과 '공생의 윤리' 차원으로 확장한다(Mandal, 2025: a841).

체르노빌 맥락에서 이러한 공생 윤리는 자발적 귀환자를 뜻하는 '사모셀리(samosely)'의 삶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출입금지구역이 된 땅으로 다시 돌아와 흙을 일구고 숲에 기대며 살아가는 고령 여성들의 선택은 흔히 비이성이나 무지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소개 이후 난민의 상실과 고립을 피하려는 시도이자 삶의 의미와 정체성이 축적된 '고향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알렉시예비치, 2011: 229; Morris, 2012: 38). 물론 그 삶은 상·하수도나 통신이 부족한 열악한 조건 속의 자급자족을 요구하기에(정영주, 2019: 230) 단지 목가적으로만 그려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오염을 이유로 자연을 위험으로 간주하고 분리하기보다, 상처 입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은 '오염된 공간은 곧 죽음의 공간'이라는 단선적인 등식을 흔들고, 폐허가 된 장소에서도 일상과 생태의 리듬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는 중국적으로 체르노빌 이후의 정의가 단순한 보상과 격리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파괴된 생태·기억·생활세계의 상호 연결성을 회복하는 윤리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함의한다.

요컨대 에코페미니즘적 성찰은 기존 환경정의 담론이 지닌 젠더적 공백과 인간 중심주의적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다. 교차성 분석을 통해 부정의의 다층적 구조를 파헤치고 다중 정의를 통해 생태주의의 지평을 넓히며 돌봄의 윤리를 통해 공생의 정치를 제안함으로써, 에코페미니즘은 체르노빌의 비극을 넘어선 새로운 '정의의 문법'을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 체르노빌 사고를 둘러싼 환경정의 연구는 이제 기술주의적 관리를 넘어,

지구의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정의로운 관계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에코페미니즘과 환경정의의 접속은 체르노빌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성찰하는 강력한 도구이자, 기후 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정의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윤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인류 공존의 미래에 한 발짝 다가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김덕호·박진희·이내주·이정희. 2016. “원전 사고와 원전 체제의 변화: TMI와 체르노빌 사고를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55: 83-120.
- 김소진. 2020. “재난불평등과 젠더,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과제.” 『민주법학』 78: 179-203.
- 김현미. 2020. “코로나 시대의 '젠더 위기'와 생태주의의 사회적 재생산의 미래.” 『젠더와 문화』 13(2): 41-77.
- 김효정. 2023. “기후위기의 페미니즘 정치학과 생태시민되기.” 『문화연구』 11(2): 33-61.
- 박언진. 2024. “에코페미니즘의 윤리적 쟁점.” 『환경철학』 37: 125-154.
- 박진희. 2013. “원전 위험 인식의 사회적 구성 -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비교.” 『환경철학』 15: 117-143.
- 박태현. 2022. “자연의 권리론.” 『환경법연구』 44(3): 95-140.
- 알렉시예비치, 스베틀라나. 2011.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김은혜(역), 서울: 새잎.
- 윤순진. 2004. “에너지와 환경정의: 원자력 중심 전력체제의 환경불평등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7: 78-114.
- 이상원·송아람·박노옥. 2012. “공간정보 모델링을 이용한 원전 사고의 환경 영향 평가: 체르노빌 사례연구.”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8(1): 129-143.
- 이상호. 2025. “환경정의와 역량: 쉐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향과전망』 125: 208-234.
- 이영환. 2022. “동물권, 인권 그리고 종차별주의.” 『환경철학』 33: 95-121.
- 임소라. 2025. “브라질 환경 담론의 전환과 자연의 권리 법제화 동향.” 『이베로아메리카』 27(2): 113-152.
- 장은하. 2016. “재난과 젠더: 취약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젠더리뷰』 43: 16-25.
- 정미선·진영우. 2011. “체르노빌 사고의 건강 영향.” 『한국환경보건학회지』 37(4): 237-249.
- 정영주. 2019. “삶의 공간으로서의 체르노빌: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64: 119-246.
- 최진이. 2024.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의 권리 연구.” 『법학논총』 44(2): 99-123.
- 한면희. 2015. “탈핵의 환경윤리.” 『생명연구』 37: 131-172.
- 한상진. 2013. “삼척시 원전 유치 도시 레짐을 둘러싼 반핵운동의 대응과 환경정의: 스케일 관점에서 본 원전 레짐과 탈핵.” 『경제와사회』 98: 77-105.
- 한정숙. 2013. “체르노빌 원전사고-20세기가 보내온 생명 파괴의 경고.” 『역사비평』 103: 199-232.
- 허리금. 2012. “젠더 관점에서 본 아시아 여성의 재난 취약성.” 『환경철학』 13: 65-90.

- Adams, Richard E., Lin T. Guey, Semyon F. Gluzman, and Evelyn J. Bromet. 2011.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isk perceptions of mothers in Ukraine, Kyiv, 19 years after the Chernobyl disaste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7(6): 637 - 645.
- Akyüz, Emrah. 2021. "Environmental Justice and Nuclear Accidents: The Case of Chernobyl Disaster,"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 and Geoinformatics (IJEGEO)* 8(3): 369-375.
- Alexis-Martin, Becky. 2015. "The Chernobyl Necklace: the Psychosocial Experiences of Female Radiation Emergency Survivors," *Belgeo* 1: 1-11.
- Anisimov, Aleksey Pavlovich and Anatoliy Jakovlevich Ryzhenkov. 2016. "Thirty years after the accident at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historical causes, lessons and legal effects," *Journal of Energy & Natural Resources Law* 34(3): 265-283.
- Barnett, L. 2007. "Psychosocial Effects of the Chernobyl Nuclear Disaster," *Medicine, Conflict and Survival* 23(1): 46-57.
-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Mark Ritter(trans). London: SAGE Publications.
- Bromet, Evelyn, J., J. M. Havenaa, and L. T. Guey. 2011. "A 25 Year Retrospective Review of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the Chernobyl Accident," *Clinical Oncology* 30: 1-9.
- Bromet, Evelyn J. 2014. "Emotional Consequences of Nuclear Power Plant Disasters," *Health Physics* 106(2): 206-210.
- Bullard, Robert D. 2000. *Dumping in Dixie: Race, Class, and Environmental Quality*, 3rd ed., Boulder, CO: Westview Press.
- Chubina, Tetiana Dmytrivna et al. 2023. "Environmental and Socio-Demographic Consequences of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 Historical Retrospective after 36 Years," *Studia Regionalne i Lokalne* 91: 101-109.
- Cooke, Steve. 2020. "Justice beyond Hmanity," chap 21. Brendan Coolsaet(ed). *Environmental Justice: Key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Coolsaet, Brendan(ed). 2020. *Environmental Justice: Key Issues*. London & New York : Routledge.
- Cotton, Matthew. 2020. "Nuclear Power and Environmental Justice - the Case for Political Equality." 202-229. A. Kaijser, M. Lehtonen, and J-H. Meyer(eds).

- Engaging the Atom. The History of Nuclear Energy and Society in Europe from the 1950s to the Present*, Morgantown: West Virginia University Press.
- Cwikel, Julie et al. 2020. "Reproductive Effects of Exposure to Low-Dose Ionizing Radiation: A Long-Term Follow-Up of Immigrant Women Exposed to the Chernobyl Accident."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9(6): pp. 1-11.
- Deryabina, Tatiana G. at al. 2015. "Long-term Census Data Reveal Abundant Wildlife Populations at Chernobyl." *Current Biology* 25(19): R824-R826.
- Di Chiro, Giovanna. 2020. "Mobilizing 'Intersectionality' in Environmental Justice Reserch and action in a Time of Crisis." chap 24. Brendan Coolsaet(ed). *Environmental Justice: Key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Edwards, Nelta. 2011. "Nuclear Colonialism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Landscape in Alaska." *Environmental Justice* 4(2): 109-114.
- Enarson, Elaine. 2000. *Women Confronting Natural Disaster*. Boulder, CO: Lynne Rienner.
- Evangelidou, Nikolaos et al. 2014. "Wildfires in Chernobyl-contaminated Forests and Risks to the Population and the Environment: A New Assessment." *Scientific Reports* 4(1): 1-11.
- Gaard, Greta. 2017. "Posthumanism, Ecofeminism, and Inter-species Relations." 115-129. S. MacGregor(ed). *The Routledge Handbook of Gender and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 Hassan, Nurul Habibah Nor at al. 2025. "Preventing Nuclear Accidents: The Need for Public Awareness, Safety Protocols and Environmental Justice." *Semarak International Journal of Chemical Process Engineering* 3(1): 37-51.
- Höffken, Johanna & M. V. Ramana. 2024. "Nuclear Power and Environmental Injustice." *WIREs Energy and Environment* 13(1): 1-7.
- Holland, Breena. 2020. chap 6. "Capabilities, Well-being, and Environmental Justice." Brendan Coolsaet(ed). *Environmental Justice: Key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Isla, Ana. 2017. "Whose Debt for Whose Nature? Gender and Nature in Neoliberalism's War against Subsistence." 372-383. S. MacGregor(ed). *The Routledge Handbook of Gender and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 Kelsey, Elin. 2014. "Beyond Doom and Gloom: An Exploration through Letters." *RCC Perspectives* 6: 1 - 73.

- Kinly, D. III(ed). 2006. *Chernobyl's legacy: Health,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impacts and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s of Belarus, the Russian Federation and Ukraine. The Chernobyl Forum 2003-2005. Second revised version*. Vienn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Kojola, Erik & David N. Pellow. 2021. "New directions in Environmental Justice Studies: Examining the State and Violence." *Environmental Politics* 30(1-2): 100-118.
- Kyne, Dean and Bob Bolin. 2016. "Emerging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in Nuclear Power and Radioactive Contamination,"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3(7): 1-19.
- MacGregor, Sherilyn(ed). 2017. *Routledge Handbook of Gender and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 MacGregor, Sherilyn. 2020. "Gender matters in environmental justice," chap 18. Brendan Coolsaet(ed), *Environmental Justice: Key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Mah, Alice. 2020. "Toxic legacies and environmental justice," chap 10. Brendan Coolsaet(ed). *Environmental Justice: Key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Malin, Stephanie. 2015. *The Price of Nuclear Power: Uranium Communities and Environmental Justice*. New Brunswick, New Jersey, and London: Rutgers University Press.
- Malin, Stephanie A. & Stacia S. Ryder. 2018. "Developing Deeply Intersectional Environmental Justice Scholarship," *Environmental Sociology* 4(1): 1-7.
- Mandal, Subhankar. 2025. "Ecofeminism and Environmental Justice: Intersections of Gender and Ecology." *IJNRD* 10(6): a839-a842.
- Møller, Anders Pape, and Timothy A. Mousseau. 2016. "Are organisms adapting to ionizing radiation at Chernobyl?" *Trends in Ecology & Evolution* 31(4): 281-289.
- Nixon, Rob. 2011. *Slow Violence and the Environmentalism of the Po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ellow, David N. 2020. "Critical Environmental Justice," chap 22. Brendan Coolsaet(ed). *Environmental Justice: Key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Perrow, Charles. 1984.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 Risk Technologies*. New York: Basic Books.
- Petryna, Adriana. 2002. *Life Exposed: Biological Citizens after Chernobyl*.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Chernobyl's Survivors: Paralyzed by Fatalism or Overlooked by Scienc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67(2): 30-37.
- Plumwood, Val. 1993. *Feminism and the Mastery of Nature*, London: Routledge.
- Rice, James. 2016. "Slow Violence and the Challenges of Environmental Inequality." *Environmental Justice* 9(6): 176-180.
- Schlosberg, David, 2007. *Defining Environmental Justice: Theories, Movements, and N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ze, Julie. "Gender and Environmental Justice." 159-168. S. MacGregor(ed). 2017. *The Routledge Handbook of Gender and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 Shrader-Frechette, Kristin. 1999. "Chernobyl, Global Environmental Injustice and Mutagenic Threats." 70-89, Nicholas Low(ed), *Global Ethics and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 _____. 2010. "Environmental Injustice, Climate Change, and Nuclear Power: Flawed Standards for Ionizing Radiation," *Journal of Applied Ethics and Philosophy* 2: 1-11.
- Suiseeya, Kimberly R. Marion. 2020. "Procedural Justice Matters: Power,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Governance," chap. 4. Brendan Coolsaet(ed). *Environmental Justice: Key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Tschakert, Petra et al. 2021. "Multispecies Justice: Climate-Just Futures with, for and beyond Humans," *WIREs Climate Change* 12(2): 1-10.
- Unger, Nancy C. 2008. "The Role of Gender in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1(3): 115-120.
- Vangeli, Alice, 2023/2024. "Ecofeminism and Environmental Justice: human/non-human interconnections," M.D thesis in 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 Wilson, Jeff. 2019. "Forests," *Our Planet*, season 1, episode 8. Netflix.
- Xiang, H., & Y. Zhu. 2011. "The Ethics Issues of Nuclear Energy: Hard Lessons Learned from Chernobyl and Fukushima," *Journal of Health Ethics* 7(2): 1-10.
- Zhukova, Ekatherina. 2020. "Nuclear Disaster as Chronic Crisis: Accounts of Radiation Embodiment by Survivors of the Chernobyl Nuclear Disaster from Belarus Born before, in and after 1986," *Health Volume* 24(5): 589-605.

Abstract

An Ecofeminist Reading of Research Trends on “Environmental Justice”

– The Case of the Chernobyl Nuclear Accident

Bae, Hyeje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traces environmental justice scholarship on the 1986 Chernobyl nuclear disaster and offers an ecofeminist reappraisal. While Ulrich Beck’s “risk society” thesis casts nuclear risk as a universal threat transcending borders and social class, this article argues that structural environmental injustice has, in practice, unevenly offloaded risk onto marginalized groups along hierarchies of region, class, gender, and species. It maps Chernobyl-related environmental justice research into three major strands – distributive, procedural, and recognition justice – showing how the field has shifted over time. Early studies primarily addressed distributive justice by emphasizing the imbalance between nuclear benefits and the burdens of radiation exposure. Subsequent work moved toward procedural justice, critiquing Soviet authorities’ information suppression and technocratic decision-making. More recent scholarship foregrounds recognition justice by examining the stigmatization of “Chernobylites,” making “slow violence” legible, and attending to intergenerational risk transmission. Building on these developments, the article asks whether ostensibly gender-neutral environmental justice frameworks obscure gendered vulnerability, and whether anthropocentric rights-based approaches inadequately account for nonhuman nature and multispecies harm. The article concludes by proposing an expanded environmental justice framework grounded in intersectionality, multispecies justice, and mutual care – one that prioritizes an ethics of life and coexistence over growth and efficiency.

Key words: Chernobyl Nuclear Disaster, Environmental Justice,
Ecofeminism, Slow Violence, Gendered Vulnerability,
Intersectionality and Multi-Species Justice

- 투 고 일 : 2026년 3월 2일
- 최초심사일 : 2026년 4월 1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4월 24일